

정책제안서

□ 제안정책

제안정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제안
대상 (수혜자)	강원도 소재 초중고 학생
소요사업비	정책 실현에 정도에 따라 상이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p>2016년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미국 12개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780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0대 청소년 대부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통되는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대부분의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도식 특징이 이용자로 하여금 진실로 인식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로 신문활용교육(NIE)에 국한되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다시 부상하고 전통 매체의 담론이 더욱 신빙성 있는 것으로 담론화되었다.</p> <p>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정보 환경에서 팩트체크, 정보에 대한 판단 등이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보 감별 능력이다. 이에 2020년, 범정부 차원의 첫 미디어 교육 정책인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이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했다. 청소년·성인 ‘팩트체크 교육’ 등 미디어 정보 판별 역량 강화 정책을 내세웠다. 가짜뉴스와 왜곡정보가 장애 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혐오적 발언이 거침없이 유통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정보판별 역량 강화를 미디어 교육의 한 부분으로 설정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정책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설계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차고는 큰 틀의 정책 비전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p> <p>이에, 지자체도 정부 기조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교육청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신설했고, 부산광역시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신설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 디지털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설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 관련 조례안을 신설하지 않아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려는 법적 조항이 전무하다.</p>

<p>목 적 (제안취지)</p>	<p>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세 부 내 용</p>	<p>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하여 각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p> <p>학교의 장과 교원들은 학교특성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매년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함.</p> <p>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원 연수비용, 교육자료 개발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함.</p> <p>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p>
<p>기대효과</p>	<p>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과 가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 함양</p>
<p>참고문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영 외 1명, “가짜뉴스의 형식적·내용적 특징과 여론 형성력: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7집 4 호 (2020) - 안도현, “디지털 가짜뉴스에 대한 청소년의 확증 편향 연구 : 경북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 20집 1호 (2020) - 홍남희 “미디어 리터러시 담론과 아동, 청소년: 미디어 이용 취약층에서 일탈의 프로슈머까지” 107호 (2021) -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2018) - 한선, “미디어교육, 가짜뉴스 퇴치 만병통치약 아니다” https://www.hani.co.kr/ (2020)